



MVPR-2007-21

VIP REPORT

2007. 11. 15.

-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정동영 후보 초청 토론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홍순직, 박덕배, 주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02-3669-40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Executive Summary 1

1.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상 2

2. 차별 없는 성장 4

3. 남북경협 의 전망 10

< 토론 > 12

■ HRI 경제 지표 27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정동영 후보 초청 토론

□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상

- **경제 지도자** : 국민들은 경제를 잘 이끌 지도자를 원하고 있지만, 반드시 경제인 출신 지도자가 국가 경제를 잘 이끌었던 것은 아니며,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성장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아님
·수치상의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여 서민에게 체감이 되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임
- **통합의 리더십** : 계층과 지역을 떠나 사회의 모든 곳으로부터 뛰어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며, 지지자 이외의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

□ 차별 없는 성장

-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 :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는 우선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다 넓은 기회가 열린 나라, 사회적 유동성이 높고 신분 상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함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 세계적인 대기업은 여럿 있어도 세계적인 중견기업은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며,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수도 없이 있었지만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
·이렇게 중소기업의 상황이 열악하니 청년들은 낮은 대우의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 비정규직 20대의 평균 월급이 88만원이라는 소위 88만원 세대의 고통이 심화됨
- **차별 없는 성장의 핵심 내용** : 첫째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모든 경제주체가 차별을 받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패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때 좋은 경제, 행복한 경제를 이룰 수 있음
- **물가 안정의 해법** : 물가 안정이 민생안정을 위해 핵심적이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수적임. 서울 이북 수도권에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임

□ 남북경협외 전망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장부상 적자라고 하지만, 사업 초기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임. 개성공단은 또한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정동영 후보 초청 토론회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7년 10월 30일
- 연사 : 정동영 통합민주당 대통령후보

1.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상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진 소견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경제 지도자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가슴속에는 뭔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봐서 이른바 거시 지표는 방송이나 신문에 좋은 것으로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먹고살기 힘든 일반 서민 대중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 어떤 경제 지도자를 원하는가? 지금부터 아마 우리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지도자가 꼭 경제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에게는 신념과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신념과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에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핵심 요소가 되겠지요?

지난 30여년간 OECD 국가 가운데 경제를 잘한 지도자로 뽑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나 블레어 총리나 이 분들은 대개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OECD 국가가운데 경제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된 사례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OECD 이외에도 태국의 탁신 총리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두 분 다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성공한 지도자로 꼽습니다. 그 분은 군인이었습니다. 추진력과 함께 그 분이 갖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것이 우리 국민의 열망과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이 원하는 경제적 변화의 욕구를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우리 경제 모습은 성장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시장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5% 성장이 저는 그렇게 나쁜 성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30만개 일자리가 나와서 현정부가 내걸었던 연간 50만개 일자리 창출의 목표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고, 성장은 하는데 소득 불평등이 계속 악화되는 현실입니다. 소득 5분위별로 소득 비교도 계속 5년째 벌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봐 주면 20대 80 사회로 간다고 봅니다. 제 목표는 20대 80 사회를 막는 것입니다. 20대 80사회를 부추킨다고 일부 언론이 썼습니다만 이 추세를 적극적으로 돌려놓고 개선하지 않으면 그런 사회가 고착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정책 수단과 철학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꿈꾸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8년 기사를 하면서, 사람을 가리는 안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문 경제 지식인 지도자분들처럼 어떤 분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이끌어갈 훌륭한 인물들인가를 식별해 내는 안목과 능력, 이것이 대통령에게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정동영이를 찍지 않았다고 해서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배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10년전 30년전에 비해서 인재 폭과 깊이는 엄청나게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꿈꾸는 사회, 그런 경제를 밀고 가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거는 50일 남았지만 저는 미리 다음 정부의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이어서 정동영이 기회가 된다면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계층과 지역,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탕탕평평의 나라, 인재 입국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재가 많습니다. 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지역과 출신과 학벌의 구분을

떠나서 정말 최고의 인재 집단이 이끄는 국가경영을 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정부 5년을 통해서 계층 통합과 지역통합을 통해서 남남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하나로 모으면 뭐든지 돌파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이 못해냈던 본질적 도전들을 우리는 성취해냈습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 민주 정부 10년. 저는 역사 발전과 사회의 변화 발전은 정립이 있으면 반정립이 있고 또 이것을 종합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 새로운 방향성이 지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끌 정부가 통합의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차별 없는 성장

■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

어제 전경련을 방문했습니다. 조성래 회장님과 김종석 교수님도 전경련 연구 소장님으로써 같이 토론했습니다만 공교롭게 전경련이 발간한 최근 자료 중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슬로건 제목이 제가 꿈꾸는, 또 대선에 임하고 있는 슬로건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방법론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같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차별 없는 성장 전략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민주주의 20년, 민주화 과정 20년 이후에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정의하기는 그것은 가족이라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도 비슷합니다만 우리에게 있어 가족은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다. 가족하면 뭔가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시합하다가 관중석에서 누군가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이 튀어나오자 경기장을 뛰쳐 나가서 항의를 한 에피소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프랑스의 지단 선수도 시합 중에 상대방 선수가 자기 누이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자 박치기를 하는 그런 사태를 보면, 가족이라는 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특별한 밸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넓은 기회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땅 코리아, 그래서 쉽 없이 개천에서 용이 나고 사회적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열려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 서민 대중이 꿈꾸는 좋은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성장이 보다 넓은 기회와 함께 수반될 때 그 속에서 가족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어제 전경련에 가서 특히 강조했던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었습니다. 이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권하고 지원합니다만 그 상생협력의 과실도 역시 대기업으로 귀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가 100억을 내고 대기업이 100억을 내서 기술 개발해서 그 결과물로 가령 품질향상과 가격인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구매 부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CR (cost reduction), 즉 단가 조절을 해 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생협력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대기업에 귀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발돋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나오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우리가 꿈꾸는 중산층 사회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은 있지만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2차 하청 기업 중에 세계적 중소기업이 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간신히, 근근히 목숨을 부지해 가는 그런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면 당연히 우리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안 가지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마음 아프게 했던 책은 <88만원 세대>라는 젊은 경제학자 두 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IMF 이전 세대에 비해서 우리는 출구가 없는 세대이다, 탑클래스 5%만 기회를 받는다. 5급 7급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5%를 빼 나머지 95%는 다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놀거나인데,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119만원, 20대가 그 비정규직의 75% 정도는 받으니까 88만원이 우리가 받는 급료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88만원에서 119만원 사이를 오갈 수 밖에 없는 출구가 없

는 인생이다. 토플 책을 집어던지고 쟁돌을 들어라. 이게 결론으로 나와 있는 데 저는 그 결론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절규, 그 것을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정권이, 역대 대통령이 모두 다 중소기업 육성을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중소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8개 부처에 걸쳐 있는 중소기업 각종 지원 정책이 대부분 1450가지나 됩니다. 세목으로 하면 4500개나 됩니다. 현장에 가면 이게 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독일에 몇 달 가 있으면서 중소기업 투어를 했습니다. 어떻게 독일은 중소기업이 이렇게 세계 1등인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땀흘리고 일하면서 독일같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충남 천안시 직산면에 있는 대부전자라고 하는 직원이 3-40명 되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례입니다. 원래는 모 자동차 회사의 전자 부품, 자동차 시트의 자동 장치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회사였는데 납품 단가에 시달리다가 결국 손을 들고 그 부품 생산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이 온수 매트라는 것인데, 겨울에 서민들이 깔고 자는 전기장판을 전기 열선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온수 열선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핵심 부품인 펌핑모터라고 물을 데우고 순환시켜주는 장치였습니다. 자다가 펌핑모터가 터져 버린일이 생겨서 소비자들로부터 빗발치듯 항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할 뻔 했고 다시 일제 모터를 사다 끼웠는데 일제도 보름 가니까 터져 버렸습니다. 수소문해서 결국 그 솔루션을 찾은 게 독일제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펌핑모터는 7만시간, 13년 보증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반품 교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으로, 소형 펌핑 모터 하나를 독일처럼 못 만드는 건가. 우리는 올해 정부 예산으로 9조 8천억원의 R&D를 집행했습니다. 2008년에는 11조나 됩니다. 120억불이나 R&D 예산을 쓰는데 펌핑모터를 독일제를 사다 써야 한다는 것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혁신해야겠다는 것입니다. 9조8천억원의 R&D 예산 중에 30%는 기초 기술입니다. 이걸 논문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70%는 제품기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응용기술이지요. 그런데 이 70%도 대부분 창고에 논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논문과 보고서와 중소기업의 애로 사이에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쓰이는데 그 세금이 바로 일자리의 80%를 담고 있는 기업의 R&D의 갈증, 이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 공무원이 현장에서 서고, 장관이 현장에 서고 대통령이 현장에 서서 뭔가 이걸 풀어내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 인식과 함께 저는 좋은 리더십이면 중소기업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상생하면서 중소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좋은 인력이고, 사람부족이 큰 문제이지요? R&D 기술 부족, 자본 부족도 문제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은 대개 공장도 자기 공장이 아니고 터도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 없습니다. 왜 대만이 성공했고 독일이 성공했고 일본이 성공했는데 왜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망이 없으라는 법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차별 없는 성장의 핵심 내용

그래서 저는 이 차별 없는 성장의 핵심 내용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장의 축이고 두 개는 차별을 해소하는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성장의 축은 지속 가능한 성장, 그냥 성장이 아니라 행복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줘야겠지요? 사람, 토지, 자본이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가 대개 가족의 책임이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황무지에 방치해 놓았는데, 이제 국가가 케어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을 전폭적이고 집중적으로 태어나서 5세까지, 부모의 지위와 수입과 상관없이 양질의 육아 보육 시스템을 정부가 깔아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세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직업 훈련 시스템, 평생학습 여기에 집중적으로 정책적 노력과 재정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토지와 노동의 공급을 위해서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 삼면이 바다이고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는 섬 경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를 통해서 만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유럽으로 가는 일이 저는 눈앞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8월 8일 북경올림픽은 서울에서 출발한 북경 올림픽

픽 응원단이 평양역을 지나서 북경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아십니까? 차기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 그 방향성에 따라서는 차기 정부 내에 대륙경제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물류가 부산항에서 수에즈 운하를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부르크로 베를린으로, 런던까지 컨테이너가 실려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같은 성장의 축을 중심으로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 해소,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이나 하청 관행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하는 것, 또 교육 기회의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세대 또는 10년전 20년전에 비해서 분명히 개천에서 용이 날 기회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신분상승의 통로는 협소해질 것입니다. 올해 임관한 판검사의 62%가 서울 강남 출신이거나 특목고 출신이라는 보도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의 실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른바 좋은 성장, 차별 없는 성장의 축으로써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망의 그물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30% 밖에 안되고 그것도 임금의 50%를 8개월간 받는 정도인데,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특히 비정규직이 노동부 통계로 570만입니다. 작년 말에 540만이었고 올 상반기에 577만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그게 아마 터닝포인트를 돈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정 3자가 협력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노측은 고용의 안정성을 얻고, 사측은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노측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정부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면 이것도 역시 상생모델이 되겠지요? 이런 방향으로 저는 성장이 중소기업에도 햇빛을 비추고, 비정규직에도, 서민 가계에도 기회를 넓혀주는 선순환이 될 때, 그리고 20%만 열심히 노력하는 경제보다는 국민 전체가 나서 80%도 함께 경제 주체로써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경제도 좋은 경제, 행복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가안정의 해법

끝으로 한 가지 더 물가 안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버스 타고 다니는 서민들 지갑을 한번 조사해 본다면 만원짜리 한 장 달랑 들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 만원의 값어치를 높여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감하는 생활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인 것 같습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집값 구조, 또 언제 떨어지 모르는 불확실성, 불안정 이 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물가안정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전세 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몇 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한 결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공과 토공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 어쨌든 주공과 토공은 자기들 이윤을 붙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 것이 부동산 대란의 도화선이 됐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헌법 제35조에 보면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하지요. 87년 헌법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민의 요구 수준은 어디까지 왔느냐하면 국민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거권을 요구하는데 까지 와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정부 대통령이 이 국민의 주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주거 안정이 되어야 첨예한 노사 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금인상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저는 집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요지에 땅값 평당 2~300만원 정도면 택지 보상 공급가격이 가능하고, 그리고 건설비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평당 300만원 안팎이면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당 600만원 정도이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부대 주둔 지역 등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있는 서울시의 10배가 넘는 땅이 한수 이북의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평화 협정 시대를 앞당기고 여기에 도로망이라든지 SOC만 집어넣으면 저는 수도권 근거리에, 경평 축으로만 뚫고 나가면 저는 얼마든지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 동쪽은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어렵고 한수 이남은 땅값이 너무 올랐고 출구는 한수 이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0평형아파트를 2억원 이하로 수도권 요지에서 중장기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전국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인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 남북경협에의 전망

끝으로, 한달 전인가 이명박 후보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다 적자가 났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바로 잡겠습니다. 장부상의 적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갑영 총장님께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서 손익분기점 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3년이면 되나요? 라고 말씀했더니, 3년이면 굉장히 빠른 것이다, 특히 장치 설비와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체인 경우에 3년이면 굉장히 빠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개성에 중소기업들이 가있는데 장부상에 적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초년도에 31%를 설비 투자에 대해서 감가상각 하고 장부상에 적자로 기록되니까 흑자가 날리 없지요. 지금 공장 본격적으로 돌린지 2년 됐습니다. 설비의 30% 씩을 감가상각으로 하고 2년 만에 흑자를 낼 기업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개성에 간 기업이 전부 적자가 났다,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투자 하란 말이나 이렇게 말씀한 걸 보고 개성공단을 추진했던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반론을 하나 하겠습니다. 초기에 갔던 25개 기업들이 2년 정도 가동했더니, 25개 기업 중에 13개가 200%, 205% 설비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대개 2천평씩 시범단지에 공장을 운영하던 분들이 추가로 4천평, 5천평씩 추가분양을 받았습니다. 설비를 두 배 세 배 늘리겠다고 추가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가 되니까 추가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장부상에 적자가 난 걸 가지고 개성공단이 적자가 났으니 계속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이 우리 경제 문제 전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에 핵심적인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가격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가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 인천 남동공단에 대화 연료 펌프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업체인데 남동공단에도 있습니다. 남동공단은 공장용지 한평에 500만원 합니다. 2천평 사려면 땅값만

100억이고 공장에는 가령 2천평에 평당 200만원씩 들어간다고 치면 40억이 추가로 듭니다. 140억을 남동공단에 집어넣어 투자해서 뭘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성 공단이나 해주 특구가 정상 회담에 합의를 기초로 해서 해주 공단이 된다면, 어쨌든 토지 값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인프라 조성비는 개성의 분양가가 14만9천원이지요. 그리고 임금은 57불 50센트입니다만, 관계자분 말씀이 공장 돌린지 2년 됐는데 개성 공단 현지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남동공단 근로자 생산성의 100%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첫째로 고학력이고, 둘째로 이직과 전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2년 동안 반복하면서 좀 더 가면 남쪽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웃돌 수 있다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 기업은 그래서 최근에 R&D 연구 기술 개발 요원을 북쪽에 충원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저임금의 경쟁력 이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2천만평으로 창원공단 사이즈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거기에 약 2천개 내지 3천개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약 50만명 규모의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창원이 50만이지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추계로 부가가치 생산액이 24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GDP가 작년 900조 정도 였으니, GDP의 2.5% 쯤 되는 규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년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GDP상승효과 2.5%를 개성공단 완공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GDP 1%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침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의 설비가 지금 한 주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가 중국으로, 인도로, 체코로, 슬로바키아로 미국으로 갑니다만 그렇게 외국으로 가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나중에 공동화된다고 봅니다. 생산기지를 원산이든 신의주든 남포에든 두고 본사와 마케팅과 R&D와 물류와 부품 소재 공급을 남쪽에서 감당한다면 한국자동차가 세계에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북 경제 통합에 아주 핵심적이고 또 상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수출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 핵심 부품의 60%를 일본에 의지해서, 250억불의 대일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과 북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생각보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박원암 홍익대 교수) 6% 성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을 하셨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상당히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포럼에서 한 달여 전에 이후보를 모셨기 때문에 그때 많이 등장하던 규제 완화나 법치 아니면 기업 환경 조성 이런 말이 많이 언급되지 않은 대신에 차별 없는 성장, 가족 행복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차별화된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차별의 내용이 무엇이나 라는 것에 대해서 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시장 경제의 어떤 원리와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결과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해서 자세히 더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성장을 말씀하시고 20대 80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과거보다 장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의 부자보다 내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시는지 여기에 따라서 행복한 성장의 내용이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차별 없는 성장이 참여정부의 성장과 분배를 통한 동반 성장 전략과 대동소이한 것인지, 아니면 기회 차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인지도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흔히 자주 하시는 표현이 가치의 대결입니다. 이 가치라는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경쟁 상대인 한나라당의 이 후보의 가치와 대결하는 새로운 가치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 후보는 요즘 중도와 경제적 실용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가치 대결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가치는 어떤 것이며 참여정부의 가치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6% 성장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뭐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히 할 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갑영 부총장) 그런데 정후보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로써 지지세력의 프론티어를 더 확장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여론 조사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8%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계신 분이나 정재계를 조사해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층에서 우리 정후보님을 바라볼 때 과연 경제 정책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정말 노무현 정부보다 더 차별화된 것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우선 정말로 글로벌 트렌드를 완전히 역행해 가는 정부의 비대화 문제, 또 기업 규제 문제입니다. 기업 규제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상생과 연결시켜서 특히 대기업들은 역차별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노사 관계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사 문제도 해외 투자자나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노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우리 경제의 투자를 제한하고 또 정후보께서 이야기하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키는데 가장 큰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통합 신당의 후보가 지금 노무현 정부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내용있는 차별화된 경제 정책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지지세력의 프론티어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영 대통령 후보) 박원암 교수님께서 차별 내용이 무엇이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CEO에게는 이윤 추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소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CEO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한나라당이 예산 소위 예산 계수 조정을 하는 마지막 소위 때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예산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복지 예산이 올해 6천억이 계산이 됐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깎은 이유가 무엇이나 하면 이것은 생산적 예산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CEO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지도자의 눈으로는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차별 없는 성장과 차별 없는 이라는 수식어 없는 시장만능이나 성장 만능의 철학의 차

이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행복한 성장의 행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일자리 불안, 비정규직 문제, 88만원 세대에 대해 말씀드렸었지요. 저도 천대 기업의 사내 유보가 360조원이나 되는데 자사주 매입이나 머니 게임이나 재테크로 가지 이게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정치와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부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조장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 조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돌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돌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할 때가 있다면 역할을 줄여야 할 것이고, 규제를 혁파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규제를 혁파해야 것이고 저는 그렇게 우리 박교수님과 그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한, 가치와 이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은 모든 것을 좌나 우나 이렇게 이분법적 잣대로 들이대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가치 논쟁은 지금 선진국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이 부딪히는 그 지점이 대개 가치에서 부딪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의 가치는 미국 공화당 쪽이 중시하는 가치의 핵심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발전 단계가 이제 가족의 행복을 요구하는 시대, 가족의 행복을 국가 전체 성장과 더불어서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할 그런 단계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 정부는 역시 지난 5년 동안 정치와 사회, 또 경제와 정치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치고 깨끗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IMD,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발표한 걸 보면 국가 경쟁력 1등이 핀란드, 2등이 스웨덴으로 나오는 데 투명도도, 1등, 2등이 되거든요. 깨끗하지 않고 썩어있는 정치를 가지고 선진국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민주 정부에서 우리 사회를 우리 정치를 깨끗하게 한 것은 선진국의 필수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며, 이것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다면 그 전의 부패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걸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평화, 이게 얼마나 물과 공기 같은 것입니까? 이걸 얻은 것이지요. 좋은 품질의 공기와 좋은 품질의 물을 얻은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의 비대화와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위원회는 대폭 정리할 생각입니다. 47개나 되는 대통령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장관들이 왜소해졌습니다. 장관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역할을 하는 비중이 커지고 독자적으로 정책 기획 입안을 하고 집행하는 기능이 왜소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를 가지고 공무원 증원을 비난합니다만, 그러나 그 증원 내용의 7~80%가 교사증원과 소방관과 경찰관 증원입니다. 저는 이것은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해소하든지 이런걸 포함해서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 좀 더 슬림한 청와대, 슬림한 총리실, 슬림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작고 크냐의 규모를 떠나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 전체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18개나 되는 장관급 부서를 장관이 14명인 미국처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처이기주의, 국실 간의 칸막이 이런 걸 없애는 것이 효율적인 정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노총 노선을 지지합니다. 이용덕 위원장이 들어와서 사회 통합적 노동 조합주의 운동을 하는데, 저는 아주 건전한 방향 설정이라고 봅니다. 투쟁적 갈등적 노사관계를 벗어나 좀 더 선진적인 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고, FDI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조도 참여하자는 이런 방향 제시, 그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같이 배려하고 같이 껴안는 그런 노동조합 운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전경련 회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노총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좀 더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현대 차의 무분규라든지 과거 또 5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우리의 노사 갈등과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같은 것이 지표상으로도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점진적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섭 안전회계법인 회장) 정부는 지난 9월 7일에 국회 한미 FTA 비준안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우리 국회가 미국 의회의 부진과 관계 없이 미리 비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후보의 입장을 분명히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한 것은 좀 민

감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금산분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명박 후보와 생각이 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걸 듣고 싶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정후보께서도 말씀하시고 정후보의 상당히 기본적인 철학같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20대 80에 대한 시각이십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해하고 있기도 하지만 20대 80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내 취지다 지금의 흐름대로 가면 그대로 고착이 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대 80의 법칙은 이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태리의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주장한 부의 편재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만, 최근에 시스템 과학 혹은 네트워크 과학이나 물리 경제학의 연구 들을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것이 부의 편재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특별한 법칙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자연시스템 혹은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근본법칙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봐도 동서를 막론하고 부나 권력이나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거나 무작위로 분배된 시스템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의 평등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보면 오히려 부와 권력의 쏠림이 극대화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떤 특별한 체제나 어떤 제도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들 학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시스템의 근본 원리로 나타나는 20대 80의 현상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개미 실험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 같이 개인의 역량이나 사회 제도나 정책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의 결과라고 본다면 이 20대 80현상은 원리상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정치 지도자 또 정책 결정자의 역할은 이 비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80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20의 부를 가진 계층들이 사회 환원을 통해서 80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후보께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대 80의 사회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 개성 공단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전 2월 15일에 김정일 위원장과 회동을 통해서 그 동안 중단됐던 남북 관계를 복원했고 그 복원으로 말미암아 개성공단 건설이 촉진이 됐고 정상회담까지 이어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또 그때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했습니다. 잘못하면 가서 그냥 돌아오는 상황인데도 가셨다는 건 상당한 결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의 발전과 정후보님의 이미지는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정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성공단의 발전과 국제 공조 문제와 남남갈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자이툰 부대 문제입니다. 아마 정후보님께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해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성 공단의 발전은 판로 문제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에 수출이 안되면 제가 보기에 개성공단의 발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반대하느냐하면 아주 감성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고 테러 지원국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피해자인 미국 국민이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감성이 녹아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그런 감성적 저항감을 녹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한미 관계의 동맹의식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과 우리 정후보님의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한 반대는 미스매칭이 됩니다. 조화가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후보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써 정부에서는 서해안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들고 있습니다. 정후보님께서도 해주 개발 특구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의 견해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이나 하면 NLL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포기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냐, 경제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평화와 경제를 연계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갖고 평화를 사고 평화가 되면 경제 협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선순환 고리가 돌아갈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악순환의 고리로 갈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사는 가정에서 남남갈등이 발생하면 엄청난 사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개성 공단 사업 같은 경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남남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김일섭 회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는 미국 의회와 연동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의회간 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가 힐러리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하고 쇠고기 소 사육 농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 동의했다고 이것이 협상력을 높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미 의회간 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 분리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어제 전경련에 가서도 천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데, 금산분리를 해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그렇게 해야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0년전에 IMF의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몇 개의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사금고화 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의 감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세계 금융 산업의 메카인데 다 금산 분리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고 세계 100대 은행의 소유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독일계 은행 6개와 영국은행 한개 빼고는 대부분 산업자본과 은행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93%가 금산 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재벌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면 이것이 아마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은행이 대출 심사 기능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은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 있고 또 모니터를 하다가 부실해 질 것 같으면 돈을 떼이기 전에 그것을 회수함으로써 구조 조정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그 두 가지 기능이 작동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산 분리에 있어서도 김회장님이 말씀하신 한나라당 후보께서는 재벌들이 은행 갖도록 하자 그래서 덩치를 키우자 이런 견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가면 자원과 이익이 강자에 독식되는, 즉 20대 80을 10대 90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20대 80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정부가 그걸 부추겨서는 안됩니다. 가능하면 이걸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합적 사회가 보다 역동적 사회입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이고 경제가 가장 강한 나라이지만 3천만명이 넘는 홈리스가 있는 사회를 그렇게 건강한 사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것과 함께 사회적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부의 쏠림을 막고 어느 정도 통합적인 사회와 같이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핀란드나 덴마크나 북구에 있는 나라들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기업 경쟁력도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주체가 대부분 중산층인 사회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훨씬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자와 열패자를 내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함께 적극적으로 껴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 성장과 압축 성장 과정에서 그런 배려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직 가족의 책임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분배중심 사고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글 같은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저는 경제 성장의 목적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20대 80이 아무리 자연 법칙이라고 하더라도, 또 디지털 디바이드 등, 요즘 정보화 지식 경제로 가면서 특히 2대 8 사회가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만 교수님은 남북 협력 문제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가이신데 첫 번째는 국제 공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군하는 것이 더 큰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대한민국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에서 한미 공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끌려가야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기가 분명한 주체와 주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합니다. 대한민국은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파병 병력을 이라크에 보내서 3년 반 정도 성실하게 주둔하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모든 대내외 상황이 파병의 연장을 끝내고 돌아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작년 말에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국회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내면서 내년 말에는 철군하겠다고 말입니다. 대국회 약속은 대국민 약속입니다. 2007년 말 철군을 전제로 파병연장을 1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정을 변경해야 할 결정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후보께서는 자원 외교를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켜야 된다, 기름 밭 위에 떠 있다, 공사 수주를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목적은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국토 방위, 국제 평화, 이것이 국군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원 외교, 공사 수주를 위해서, 기름 밭 위에 떠 있으니까, 저는 이 같은 발상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미 공조, 저는 철군하고 새 정부 출범해서 한미 관계를 후레쉬 스타트 하겠습니다. 새로운 동맹, 미래 동맹을 향해서 당당하되 그러나 한틈의 간격도 없는 긴밀한 공조를 해낼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자존하고 내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할 때 저는 강대국 미국도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스 매치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한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NLL 국경을 포기한 경제 협력이다 이런 말씀, 서해 평화 협력 지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0년 과정 중 제일 큰 위기가 언제 왔느냐 하면 99년과 2002년에 서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보수정권이 있으면 쳤을 것입니다. 국지전에서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지전이 더 큰 충돌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참 잘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NLL이 영토냐 라는 논쟁, 그건 소모적 논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밤이 되면 철창문이 닫히고 총을 마주 겨누고 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철문이 열리고 700대의 차량이 아침에 개성으로 넘어갑니다. 매일 7-800대가 출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긴장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아직, 특히 서해는 아직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NLL은 1954년 UN군 사령관이 유엔군 전투기와 해군 군함이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도록 그은 선입니다. 바다에 경계선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영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바다를 국가간에 경계선으로 그어놓은 나라는 없습니다. NLL은 바로 그런 선입니다. 그것이 쪽 2-30년 오다가 92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기본 합의서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한 게 무엇이냐 하면 남북간에 해상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 지금 관할하고 있는 기존 수역을 그대로 관할하자, 경계선은 나중에 추후에 획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제 방침은 바다에 개성공단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개성은 6.25전에는 우리 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분명히 북한이 관할하는 북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개성땅 100평방킬로미터를 우리에게 내 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긴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바다에 남쪽 관할 해역, 북한 관할 해역을 잘 획정해서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고 바다 목장을 만들고 개성 공단을 만들고, 그리고 해주로 가려면 NLL을 피해서 공해상으로 돌아서 동해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민간 선박 직항로 터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 합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긴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개성과 해주와 인천 영종도, 인천항을 연결하는 3각 평화 경제 지역을 창출하면 이것이 상해 푸둥과 일본의 오사카 간사이 지역과 경쟁하는 동북아의 핵심 경제 성장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NLL이 우리 영토인데 거기다가 무슨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의 발전 추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 1980년에 뉴스위크에서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가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한국이 맏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년 간 각종 국가 경쟁력 랭킹에서 대만은 3등 홍콩은 2등 싱가폴은 1등을 했는데 한국은 17등이 최고였고 올해 말을 보더라도 22등에서 38등 정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잠재력을 현실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또 역으로 보면 앞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1, 2, 3등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1, 2, 3등 할 것인가 하는 게 과제인데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교육경쟁력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또 제가 2년 전에 중국 항주에서 열린 세계 인사 관리 학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초청 연사로 중국 공산당의 조직부장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국은 앞으로 탤런트 스트레티지(talent strategy) 인재 전략을 추구하겠다, 이제 형평성보다는 한 두 사람이 중국과 세계를 끌어내가는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바로 지난

주에 한국경제 신문이 주관해서 세계 인재 포럼을 열었는데, 거기 슬로건은 인재가 미래다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경제 신문에서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 한 두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뿐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통합과 탕평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모든 국민이 살면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교육을 제공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1등을 향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교육 시스템도 대체적인 게 아니라 보완적으로 동시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께서 교육에 필요한 투자의 초점을 평생 학습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합니다만 지금 세계에 나가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보다는 아예 외국에 맡겨서 시키고 있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한국에서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특목고 출신이 한국의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기득권층을 할 게 아니라 이들이 바로 해외에 나가서 한국의 위상을 올리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을 기르기 위한 국내에서의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금산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현실보다 정의가 앞서고 또 평소에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법을 초월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정후보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기업에서도 당연히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을 구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규범,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지키면서 이와 함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둔 인재를 길러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인재를 또 국내에서 길러야 한국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서도 동시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시려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강정호 현대정보기술 부회장) 저도 차별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승희 원장이 작년에 신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경제사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 차별화가 나라 경제 발전의 근원적 원리였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또 행정 수도, 수도권 규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현상 유지, 강화, 개선 등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학생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벤처 정신이라고 할까 대학생들의 창의적 정신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 중소기업의 창업율이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따지고 본다면 차별화 원리가 약화된 결과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동영 후보)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부회장님께서 평등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등주의 경제관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건강한 자본주의,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교수분이 쓴 논문 요약본을 읽고 이거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 공정한 경쟁 질서, 그리고 기득권층으로부터 이 공정경쟁 질서가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제가 건강한 자본주의와 건강한 시장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기업 특정 계층 특정 자본으로부터 유착되거나 그런 쪽에서 부를 축적한 지도자가 있다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이해 관계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건강한 자본주의이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이나 분배나 평등이나 자유주의나 하는 이분법은 이미 20세기로써 폐기된 개념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자전거의 앞뒤 바퀴입니다. 두 바퀴가 굴러가야 되지요. 저는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 지향하고 펼쳐나갈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을 200개 가까이 지방으로 이전한 결정은 대단히 과격적 발상이었다고 생각하며, 굉장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절차는 상당히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정부는 시멘트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균형발전은 아닙니다. 여기에 삶, 지방의 산업과 학교와 문화,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결합하는 성장거점 하나씩 만들어지는 쪽으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여기에서 되돌리는 것은 엄청난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으로 밀고 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교육에 관한 정책과 관점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면 제가 당선 되면 교육 대통령을 선언하겠습니다. 5년제 대통령 단임제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본질적 개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힘으로는 안 되고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의 평준화라든지 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단임제 대통령은 엄두를 낼 수가 없었지요. 업무 파악하다 1년 가고 그 다음 지나면 결국 대학입시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시 개혁 땀질 손질 이런 걸로 20여년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육 개혁, 교육 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를 선포하고 1년 동안 전국의 학부모, 교사, 전문가, 학생, 시민 사회, 여야 정당, 정부 모두가 지혜를 맞대고 과거에 박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수출 진행 확대 회의를 주최했듯이 국가미래전략 교육 회의를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매월 분기별로 주최하고 방향을 모아가겠습니다. 학제를 어떻게 하고 대학 경쟁력은 어떻게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해소하고 우수 대학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또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그런 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하고 2011년을 교육 혁명 원년으로 삼아서 국민들을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좀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20%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을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해방시켜주고 싶

습니다. 작년에 집에서 저희 아들이 아빠 이것 좀 보라고 해서 제가 우연히 접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동영상은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신, 수능, 논술 3종의 트라이앵글에 갇혀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절규를 청소년들이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인데 절절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특과원하면서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면서 살아봤습니다. 영국에 가서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독일에 가서도 중소기업과 학교 부지런히 방문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중고등학교까지 그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학교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때 저도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만 주로 취직공부입니다. 일자리 잡기 위한 공부지요. 대학에 가서 학문을 연마하는게 아닌겁니다. 대학 경쟁력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나 영국과도 말입니다. 그래서 수월성의 핵심은 중고등학교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중고등학교는 풀어줘야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나이에 지금 이상으로 더 쥐어짜서 경쟁력이 나오니까? 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공부하고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가장 조기에 숙성된 인력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10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ISA 국제 학력 성취도 조사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2등, 과학 3등, 종합으로는 세계 5등에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뭘 더 쥐어짤단 말입니까? 여기는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기타도 치고 동아리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그 감수성이 많은 시기에 미래 경쟁력인 창조력과 상상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풀어줘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은 진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서열이 아니라 적어도 50개 정도의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가 있는 대학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야 되지요. 2007년도 교육 예산이 237조의 전체 예산 중에서 30.7조입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재정, 즉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5조가 들어갑니다. 기본 전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지난 몇 십년 동안 사립대학에는 국민의 세금을 왜 넣느냐 해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고 그 규모가 사립학교 전체 운영비의 2, 3% 미만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사립대학교에 국가재정으로 운영비의 20~25%를 보조해 줍니다. 저는 이걸 바꾸어서 고등교육 재정을 지금 전체 교육 예산의 15-6%로부터 두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조 들어가던 것을 5조 더 추가해서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저는 몇 개의 우수한 대학을 가야만 일자리도 얻고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것으로부터 지역별로 세계 200대 대학 반열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점 대학들을 육성하고 또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학과들을 육성하는 정책 시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협약안을 만들고 준비해서 3년 뒤에 시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우리나라 못하느냐. 제가 작년에 리관유 싱가포르 수상 만났을 때 두 가지 이야기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는 밝게 본다. 왜냐 한국에는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자산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참새나 독수리나 오장 육부는 마찬가지로 가지이다, 그러니까 싱가폴은 작은 나라이지만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미 선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거나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싱가폴 모델에 적용시키는 것이 오늘의 성공적인 국가경쟁 핵심 기법이였다 라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표가 있고 우리 국민이 동의한다면 한국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내서 경쟁력이 있는 대학 만들면 대한민국 경쟁력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학은 82% 가는데 대학원 석사 박사 나온 인력은 전체 3% 밖에 안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1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가 학사 학위 따기 위한 것인데 학사 학위만 갖고는 국제 경쟁력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는 풀어주고 돈 좀 덜 들게 하고 대학은 좀 더 공부시키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대통령이 되도록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RI**

정리 및 교열

남충현 연구원 (netch30@hri.co.kr) ☎ 02-3669-4142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P)	2007(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2	5.0	4.5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9	4.5	4.4
	민간소비 (%)	4.9	7.9	-1.2	-0.3	3.6	4.2	4.3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4	3.2	4.6
	건설투자 (%)	6.0	5.3	7.9	1.1	-0.2	-0.4	2.5
	설비투자 (%)	-9.0	7.5	-1.2	3.8	5.7	7.6	7.5
대 외 거 래 준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61	-30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61	11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250	3,70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4.4)	(13.8)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3,59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8.4)	(16.1)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8	2.2	2.5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8	5.0